

사회적기업을 통한 서울시 양극화 해소 방안

2008. 3. 10 제7호

정병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경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 약

- I.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개막
- II.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실험
- III.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대응 전략

요 약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사회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다시 구조적인 실업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져 소득 불평등과 소비, 교육, 보건의료 전반에서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양극화가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Soical Economy)라는 전통에서 발전한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의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실업이나 양극화와 같은 심각한 사회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동시에 강한 경제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등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조사 결과, 대부분 운영자금 및 사업장 부족, 창업 및 경영에 관한 정보 부족, 판로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처가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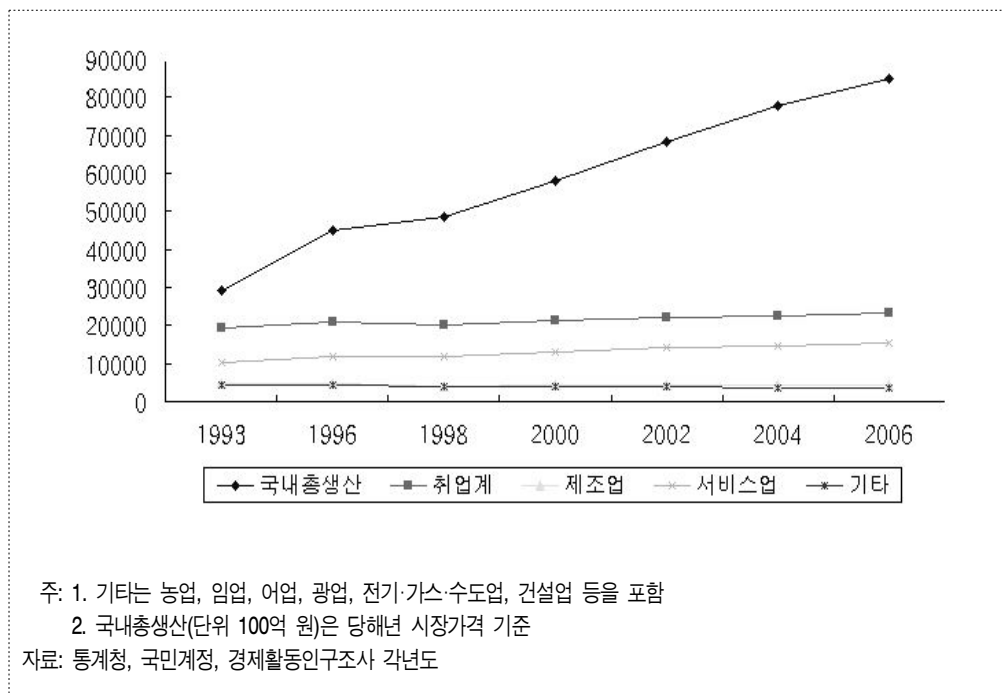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제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적으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주요 현안인 자금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자금(가칭)’을 마련하고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사회연대은행 등 소액대출금융기관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과 공공,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 나아가 일반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I.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개막

고용 없는 성장으로 실업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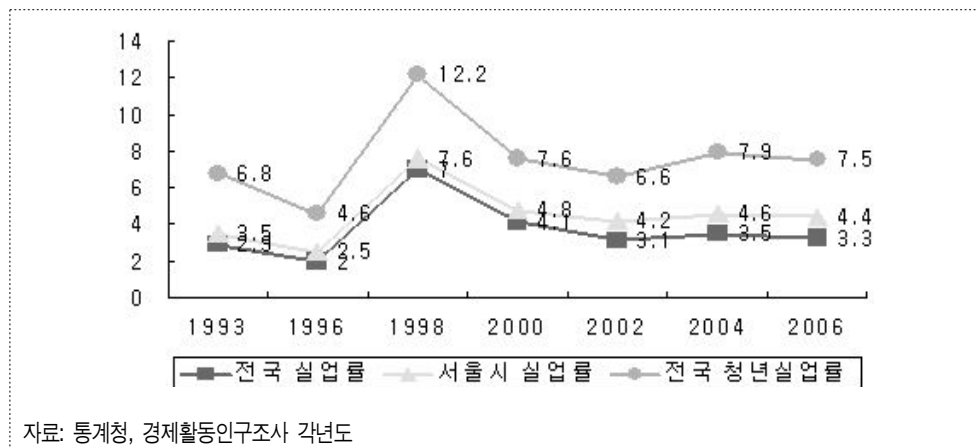
□ 고용 없는 성장 사회와 높은 실업률

-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동반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고용이 뒤따르지 않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초래
- 1993~2006년 동안 경제 규모는 매년 14.8%라는 외연적 확대를 보였으나, 취업자 수는 1.57% 증가에 불과
- 특히,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매년 0.9%의 절대적 감소, 그나마 서비스업에서 3.9% 증가



[그림 1] 산업별 취업자 추이(1993-2006)

- 고용 없는 성장은 구조적 실업을 유발하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시 구조조정은 이를 심화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 1998년 정점에 도달한 실업률이 2000년 이후 다소 안정화되었으나, 구조적 실업의 최대 피해계층인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8%대를 유지



[그림 2] 전국 실업률, 서울시 실업률, 청년실업률(1주 기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심화

□ 비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증가

-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중간계층 감소와 하층계층 증가 초래
- 2006년 현재 전체 종사자 가운데 내수경기에 극도로 취약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고용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32.8%를 차지
-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47.2%를 차지
-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자 간 현저한 임금 격차가 존재
-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 임금은 40% 수준, 임시직은 51% 수준

<표 1> 계층별 임금격차(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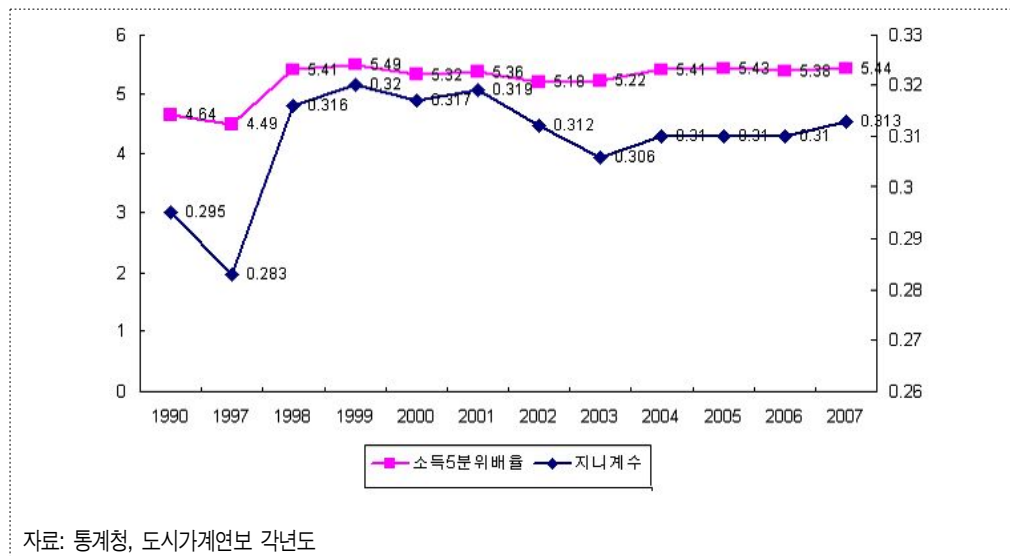
성별		교육수준별		노동기간계약		노동시간형태	
남성	194.66(100)	중졸이하	98.8(33.2)	일용직	78(36.9)	전일제	166.5(100)
여성	111.15(57.1)	고졸이하	141.0(47.3)	임시직	107(50.7)	시간제	51.2(30.8)
		대졸이하	227.8(76.5)	상용직	211(100)		
		대학원졸	297.5(100)				

주: ()는 기준통계 100을 기준으로 한 수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년) 원자료, 이성균, 2007, 노동시장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재구성

□ 소득불평등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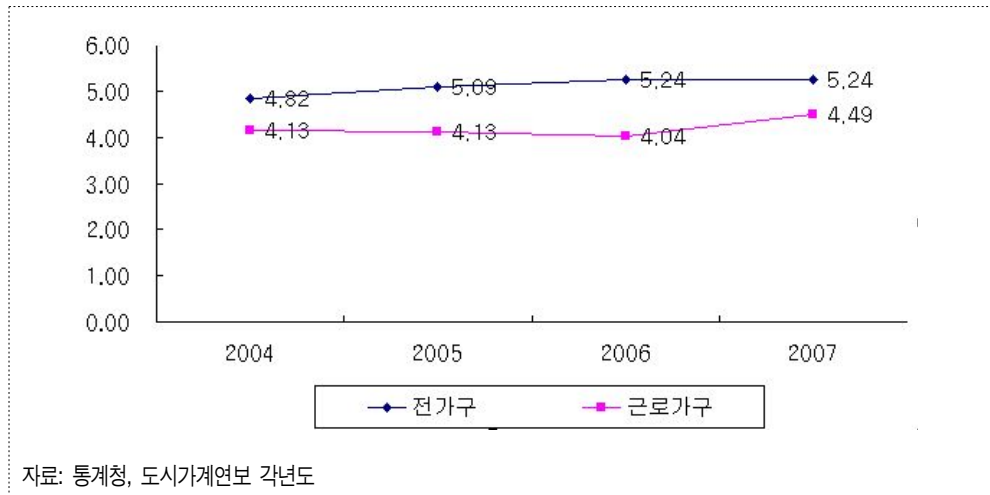
-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지표인 소득5분위배율의 경우, 지난 1999년 5.49로 정점에 도달. 2003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7년 현재 5.44를 기록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2003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07년 현재 0.313을 나타냄(0.4 이상은 높은 불평등도를 의미).



[그림 3] 도시근로자 소득5분위배율과 지니계수 변화 추이

- 가계소득의 격차는 소비,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계층 간 격차를 심화

- 특히, 교육비의 계층 간 격차는 양극화 상태를 대물림할 우려
 - 2007년 현재 전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비 5분위배율은 5.24
 -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5분위배율은 4.49



[그림 4] 가구별 교육비 5분위배율: 전 가구와 근로가구

고용 없는 사회와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 증가

□ 사회적 병리 현상 증가

-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비효율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유발
- 계층 간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나 양극화의 심화가 사회의 범죄율이나 자살률을 높인다는 많은 실증연구가 보고되고 있음.
 - 범죄율은 지난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년 정점을 기록
 - 자살률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로, 2005년 무려 26.1%를 기록

<표 2> 연도별 범죄율 및 자살 사망률

연도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6
범죄율 (십만명당)	3075.2	3102.7	3457.0	3716.5	4193.6	4188.0	3934.3	3787.4
자살 사망률 (십만명당)	10.6	11.8	14.1	16.1	15.5	24.0	26.1	23.0

주: 범죄율은 범죄종류별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 검거인원수 통계와 전국 추계인구 통계 활용하여 산출

자살 사망률은 사망원인(103항목)/성/연령(5세계급)별 사망자수, 사망률 활용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통계; 범죄분석통계;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선진도시들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처

□ 고용 없는 사회의 높은 실업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의 주요 도시는 사회적기업을 유력한 대안으로 적극 활용

- 사회적기업은 사회복지, 육아, 보건의료, 노인 보호, 환경 등 사회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 자립적인 고용기반을 구축
- 우리나라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환경 등의 분야에 약 91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
 - 이 가운데 서울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약 15만 명 부족한 것으로 추정

<표 3> 잠재적 사회적 일자리 수(2007년)

(단위 : 만개)

구분	계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환경	사회안전/기타
전국	30.4	24.5	30.4	21.4	6.1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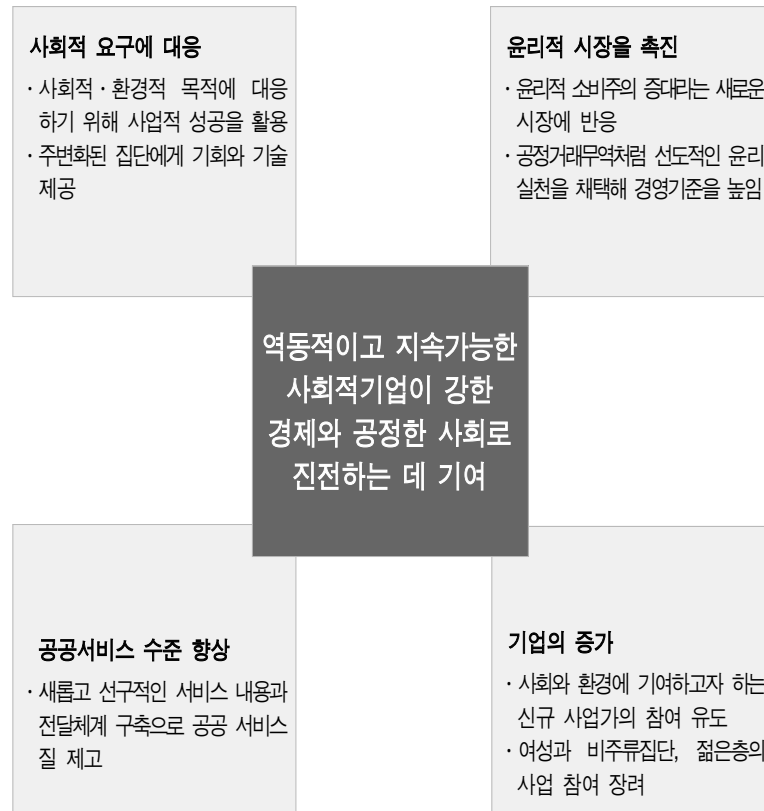
자료: 2006년 1월 기획예산처 조사

II.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실험

사회적기업의 연원과 기여

- 사회적기업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집합적 기업가 정신과 성숙한 시민사회를 토양으로 발전
 - 1980년대 미국에서 기업가의 열정과 활동가 의식을 갖춘 사람을 위한 후원 지원 네트워크인 '사회적기업가들'(Social Entrepreneurs)이 생기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989년 '사회적 경제' 부서를 설치.
 - 사회적 경제란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이 포함된다고 정의
- 보건복지부는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자활사업으로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자활공동체 사업을 추진
 - 2003년 노동부에서는 자활사업과 별도로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진
 -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활동을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법제화
 - 협동조합 및 비영리단체 활동의 역사가 긴 서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기업의 법제화를 추진
 - 1991년 이탈리아, 1995년 벨기에, 1998년 포르투갈, 1999년 그리스, 2001년 프랑스, 2005년 영국에 사회적기업 관련 독립법을 제정하여 시행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서비스 향상 및 기업 수 증가에 공헌



자료: Cabinet Office,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2006, UK

[그림 5] 사회적 기업의 공헌

사회적기업의 형식 다양화

-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은 현재 진화 중

- 사회적 ·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면서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공통된 인식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일화된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없는 실정
- 1996년 유럽연합 15개국 연구자로 구성된 EMES(The Emergency of Social Enterprise in Europe)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9가지 기준을 제시

경제적 기준 4가지	사회적 기준 5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 비영리조직과 달리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 · 정부나 기업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일정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주주는 의사결정 참여 권한 · 사회적 기업 운영에는 상당한 경제적 위험 존재 · 자원봉사자가 있어도 최소한 유급근로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특정육구를 공유한 시민집단이 주도 · 의사결정권한이 자본소유에 기초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1인 1표에 의해 공유 · 기업활동에 서비스 이용자 등의 이해당사자 참여로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 강화 ·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제한적 이윤배분 · 지역사회, 특정집단을 위한 명확한 목표의 추구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로 사회적기업을 협소하게 규정

- 취약계층의 노동 통합과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만 사회적기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영국은 사회적기업에 부합되는 목표와 운영을 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포함하여, 광범위한 형태와 다양한 활동 추진

한국(사회적기업육성법)	영국(국가 사회적기업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그러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가 주주나 소유주를 위한 이윤 최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조직이나 공동체에 원칙적으로 재투자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

사회적기업의 활동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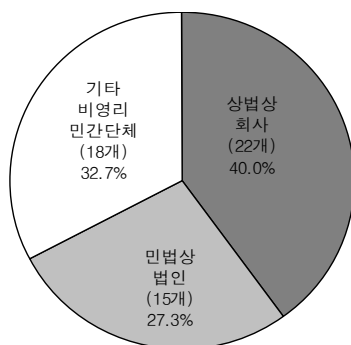
□ 2008년 2월 현재, 노동부 장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55개

- 166개 단체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였고, 이 중 55개 단체가 인증 취득. 인증 단체의 29%인 16개 단체가 서울에 소재

- 55개 인증 단체의 경우 상법상 회사가 22개(40%)로 가장 많고, 비영리단체가 18개(33%), 민법상 법인이 15개(27%)임.
- 영국의 사회적기업 수는 약 55,000개 정도. 런던에만 5,300개의 사회적기업이 약 20만 명을 고용하고, 총 매출액이 지역 총 생산액의 2%를 차지(2004년)
-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7,368개소에 278,849명이 종사. 이 중 임금근로자가 87.6%, 비임금근로자가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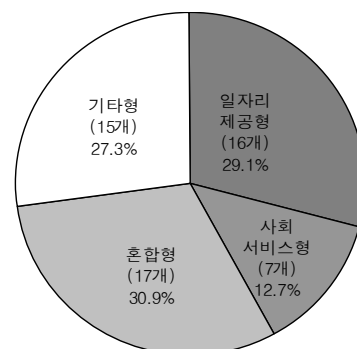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과 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이 대다수

-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목적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16개(29%), 사회서비스 제공형 7개(13%),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함께 추구하는 혼합형 17개(31%), 기타 15개(27%) 등으로 구분
- 이탈리아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이 43%,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57%를 차지(2003년)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08

[그림 6] 인증 사회적기업의 조직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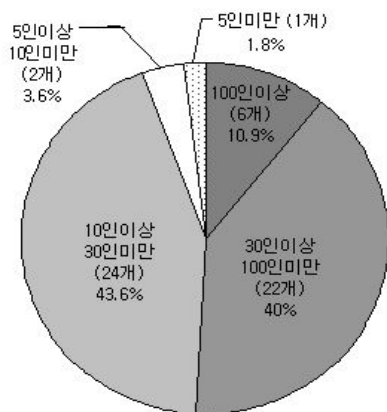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08

[그림 7] 인증 사회적기업의 목적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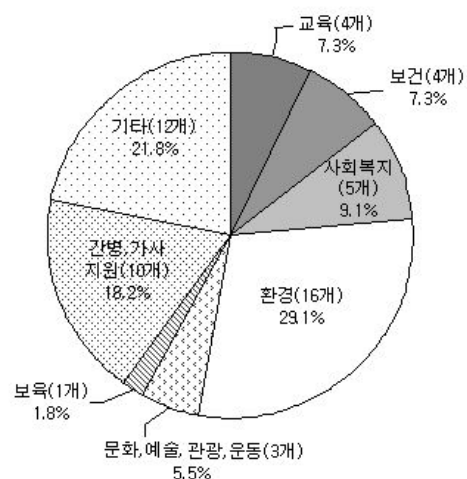
□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업체당 평균 48.1명 고용(서울 51.6명)

- 인증 사회적기업의 총 근로자 수는 2,647명으로, 사업체당 평균 48.1명을 고용
 - 서울시 소재 인증 16개 단체의 총 근로자 수는 825명으로 사업체당 평균 51.6명을 고용함.
- 사회적기업은 고용규모가 10~30인 미만 사업체가 많음.
 - 55개 인증 단체 중, 10~30인 미만 사업체, 30~100인 미만 사업체가 대다수
 - 이탈리아는 내부 민주주의 확보와 조합원 정체성이라는 협동조합 고유의 목적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커지면 분사하는 전략과 특정분야 전문화 전략을 취함으로써 사업체당 평균 고용규모는 17명 정도
- 인증 사회적기업의 29%(16개)가 환경분야에서, 18%(10개)가 간병·가사지원 분야에서 활동. 약 50%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활동
 - 영국은 환경가치추구형 17%, 환경 및 대인지원 혼합형 34%, 대인지원형 49%로 구성. 사회적기업 8%가 소외계층 취업제공에 주력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그림 8]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008

[그림 9]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 유형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적기업: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 원주의료생활협은 2002년 설립,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 35명의 근로자 종사
- 2004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에 원주 의료생활협과 원주 나눔의 집이 참여한 것이 사회적 기업 발전 계기
- 실업극복재단의 대부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권 진입하여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 유럽 사회적기업 발전과정과 유사하게 지역사회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발전
-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자본 창출 등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
- 2007년 현재 신용협동조합, 한살림생활협, 공동육아협동조합, 의료생활협 등 12개의 조직들이 원주협 동조합운동협의회에 가입, 다양한 협동조합의 협력네트워크가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원동력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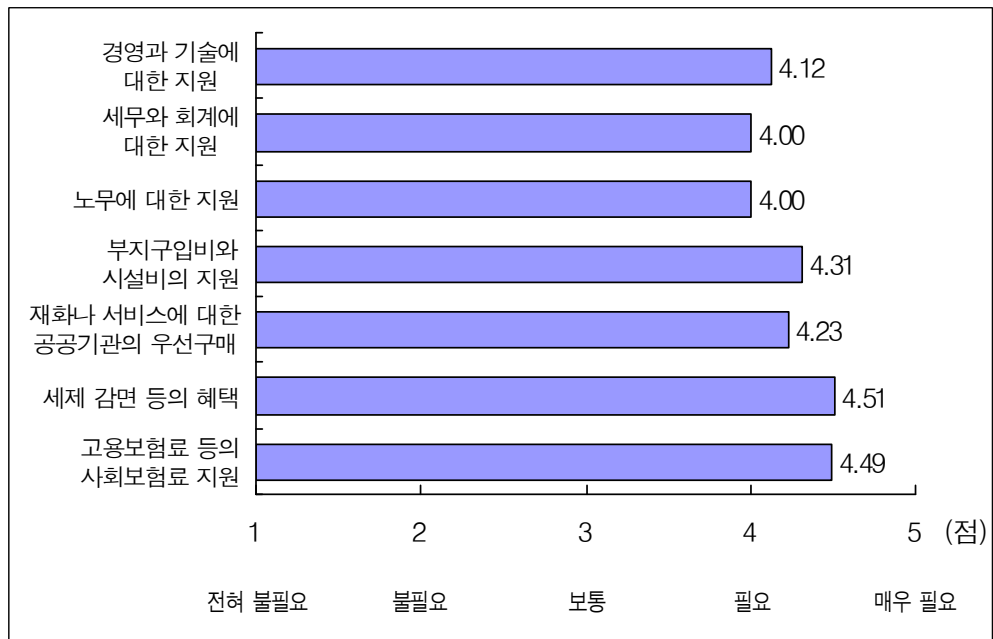
출범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

-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2007년 7월)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음. 하지만 아직 사회적기업육성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지원 및 협력체계 또한 미미한 것으로 판명
-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업적기업 121개 사업체 조사 결과, 7개 지원항목 모두 필요한(4점 이상) 실정
- 특히 세제 감면혜택(4.51점)과 사회보험료 지원(4.49점)은 가장 절실한 수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유형

-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전문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
-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지원·용자, 국·공유지 임대
- 사회적기업 생산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 지원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2008

[그림 10] 사회적기업의 항목별 정부의 자원 필요도

- 지난 4~5년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부족한 실정
 - 이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가 서울시를 거치지 않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직접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점과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정책방향의 차이에서 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도 한시적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해 사업자금 융자 및 전세점포 임대, 지방정부의 국·공유지 우선 임대, 공공기관사업의 우선 위탁 및 우선 구매,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

Ⅲ.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대응 전략

양극화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을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대책의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

- 양극화 대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정책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전략과 지원책 추진 필요
- 세계기구 및 유럽 국가들은 현재 직면한 사회·경제·환경문제 해결책으로 사회적기업의 기여를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
- 유럽연합은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및 사회양극화 해소의 새로운 수단으로 사회적기업에 주목하고 사회적 경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함. 유럽사회기금으로 유럽 전역의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지원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전략과 과제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구축
 -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제정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정보 자문 및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네트워크 구축
- 혁신적인 자금 지원
 - 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 자체적인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자금’ 별도 설립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방과 중앙정부, 공공과 민간, 사회적기업 간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의 대응전략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서울시 전반에 확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정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육성법(2006년)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위한 기본 요건이 갖춰졌으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인식과 정책적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
- 사회적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우선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 전략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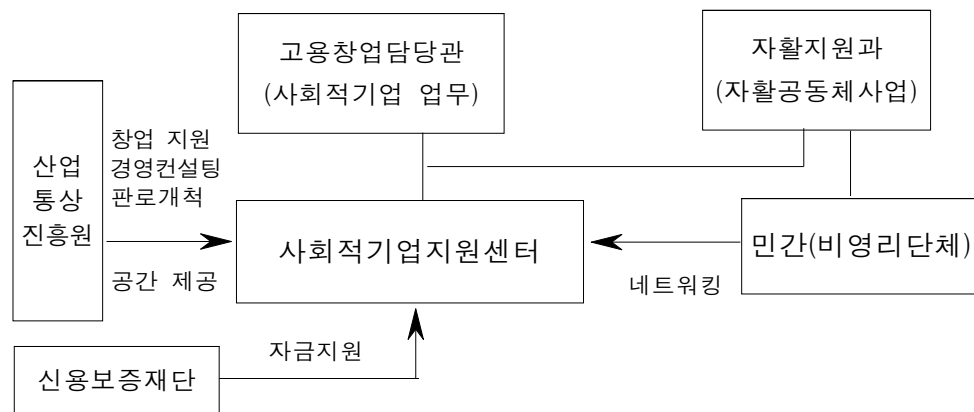
□ 적절한 정보 및 경영자문 등의 사업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공률 제고

- 영국은 사회적기업이 기존 기업과 차별화된 경영자문 욕구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이 최고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체계를 개편
- 기업지원서비스 'Business Link'에서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
- 사회적기업의 경영자문 전문가에 대한 국가자격 기준 설정과 훈련자료 개발
- 사회적기업 임원과 관리자, 직원을 위한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훈련 실시
-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축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추진

□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칭)을 거점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기존에 여러 조직에서 분산 추진하던 양극화 대책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

-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연대은행과 신용보증재단 등이 연계된 종합적인 금융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 지원을 하고, 사회연대은행과는 대출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
- 금융지원과 함께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창업 및 경영컨설팅이나 작업 공간 제공 등의 서비스를 병행 지원



[그림 11]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 협력네트워크 체계

혁신적인 자금지원체계 구축

-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45%가 창업의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을 지적
-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중에서 설립자금 조달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 대안금융 대출을 받은 경우는 2.5%에 불과
- 설립자금 조달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가 55.4%로 가장 많고, 사업체 참여자의 개인자금이 47.9% 순으로 많음

- 영국은 사회적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 투자자와 사회적기업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자금시장 실패 문제 해결에 역점

□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사회연대은행(무담보·무보증 원칙)을 통해 금융에 접근할 수 있으나, 사회연대은행만으로는 늘어나는 사회적기업의 금융수요를 충족하기에 제한적
 - 2006년 155개 기업에 32억 원, 2007년 167개 기업에 34억 원 지원
- 증대되는 사회적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시는 자체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 현재 서울시는 중소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2007년 기준 8,700억 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저소득층 자활 및 창업 자금지원으로 30억 원을 배정·운용(신용보증재단에 의한 신용보증부 지원)
- 사회적기업이 금융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
 -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한도를 정하고, 매년 최소 10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별도로 '사회적기업육성자금'(가칭)을 확보
- 중소기업육성자금 외에 '사회연대정신'에 입각하여 현재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프로젝트의 협약체결 시, 사업예산 가운데 약 1%를 '사회적기업육성자금'(가칭)으로 적립
 - 공공프로젝트 예산 1조 원에 대해 약 100억 원 확보 가능

- 사회적기업의 자립적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최장 3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는 은행금리를 보전

- 영국은 정부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 금융기관이 존재
 - 빈곤지역의 사업체와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지역사회발전금융기관이 있음. 이들 기관 대부분이 사회적기업이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함. 지역사회발전금융기관에 투자할 경우, 개인 및 법인투자자는 5년간 매년 5%의 세금경감 혜택
 -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자선기금조직들이 있음.
 - 정부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장기금융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 정부가 사회적기업 대출기관에게 보증을 해줌.
- 이탈리아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보장세 면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혜택,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20만 유로 이하 공공기관사업의 우대 조칙 적용
 - 이런 조세혜택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연간 수입의 3%를 새로운 사회적기업 창업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마르코니 펀드에 기부해야 함.
 - 1995년 유럽고용재단 출자금을 바탕으로 로마저축은행이 사회적기업개발주식회사 설립, 이탈리아 최초의 윤리채권인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함. 정부지원은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지역별 컨소시아는 은행의 자금 대부 시 보증인 역할을 해줌.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용과 복지를 비롯해, 환경, 교육, 금융, 산업 등 여러 관련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종적·횡적 협력 네트워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지역단위 협력 네트워크 등으로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

-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칭)를 거점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고용창업담당관에 사회적기업 업무팀을 배치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부처 간 정책협의 및 기획조정 역할
-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칭)가 민관협력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 영국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업무를 06년 통상산업부에서 내각사무처로 확대 이양
- 런던의 28개 기초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연락회'를 구성하여 활동
- '런던 2020 사회적기업 전략'도 런던개발공사, 런던사회적기업센터, 런던의회, 런던지역청, 내각사무처 제3섹터부, 보건부의 사회적기업과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립
- 통상산업부 예산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 전국 네트워크인 '사회적기업연합회'가 2002년에 설립. 정부와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중심점 역할
- 런던시와 런던개발공사 예산지원으로 런던의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인 '런던사회적기업센터' 설립. 중앙정부, 런던시,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중심점 역할
- 이탈리아는 지역별로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아(207개)가 결성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네트워크 중심점 역할을 함.
- 전국연합체인 컨소시아도 있음.

-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 일반 기업이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
 -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계층,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관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
 - 최근 문화영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메세나(Mecenat) 제도를 사회적기업 영역에 도입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일반 기업의 네트워크도 활성화
 - 메세나는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후원 외에, 판로 확보나 물류 효율화에 기여

정병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3
jbs66@sdi.re.kr

신경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55
skhee@sdi.re.kr